

“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위한 ‘쇄빙선’ 역할해야”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서

“전북 등 자치도 4곳, 활발한 정책 교류 등 통해 지방 강점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은 21일 제주 선호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지방분권의 비전과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곳의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부단체장)과 의회 의장(부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발전 방



이명연 부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가도막는 두터운 얼음을 깨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쇄빙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가도막는 두터운 얼음을 깨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쇄빙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 4곳이 활발한 정책 교류와 성공 사례 교류를 통해 지방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논의된 방안을 실천으로 옮겨 주민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방 자치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파면한다’ 피켓팅하는 국민투표 토론회 참석자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교원 정원 감축문제 대응 학생 교육권 지켜내야”

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청 예산심사 돌입... 심사 앞서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형열)가 21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열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분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분예산안은 전년도 분예산 대비 710억 원(1.6%)이 증가한 4조 5,732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력 신장 정책 집중 지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현안·수요 및 정부 시책 반영 △기초학력, I프로그래밍 확산 등 10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 △교육발전특구·교육 특례 사업 발굴 운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전 부위원장은 “도내 103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중 37개교는 교사, 42개교는 교육공무직원, 24개교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원이 병행하여 사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학교별 운영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사감 직종 채용

과 그 비용의 문제, 소규모 지역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전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전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 업무 과다와 심의 지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교사들을 지원하고, 지나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도 교육청의 교권 보호 문제를 질었다.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연수 및 심리치료 등 교권 보호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교육청의 그럴듯한 말과 대책들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늘어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들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감이, 교육장이, 학교장이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교

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의 교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교육청 대응의 안일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초·중등교사 정원이 260여 명 감축 예정”인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은 들어 보았는지,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은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안정적 교사 수급 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여유 정원까지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생 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더라도 학급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사 정원 배정의 기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고, “임실, 무주 등 농어촌 지역 교사 감축률은 20% 가까이 되는데, 과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도의회와 소통하여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재 발행에 신중한 접근 필요”

도의회 기획행정위, 기획조정실 등 대상 예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1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은 전북자치도는 과거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25년 2,0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접근과 지방채 상환

등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 빚을 늘리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활용하여 관리를 해주길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기획관의 240억의 예산 중 신규사업이 3,100만 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규 사업이 없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데도 선심성, 행사성, 일시성 민간 보증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정부 게임저작권 정책 강화·예산 확충” 한목소리

국회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갑)과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21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회에서 최초로 게임 저작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게임사,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인연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운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K-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게임사 간의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2023년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7만 달러 감소한 83억 400만 달러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역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K-GAME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이다”면서, “그러나 데이브데이브



21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운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운덕 의원실 제공)

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말하면서, “국회 문체위 간사로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 정책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 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과 관련한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유창성 경희대 교수는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게임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강태욱 변호사는 ‘넥스-아이언메이슨 등을 비롯한 게임 저작물의 분

쟁 현황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게임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 ‘저작권 신타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게임 저작권 관련 유관 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시군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 열악”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1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분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용 저수지 예산과 관련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저수지와 비교해 시·군의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이 열악하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와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 등 각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예산 수립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규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명확한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예산 수립 전 촘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신규예산과 관련해 최신식 시설투자는 필요하나 축산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농가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선 의원(김제2)은 농협본부, 지역농협 등 중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음을 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시 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지원

박용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피해 학생 상담 지원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았다.

박용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장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함께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내 산업보안 강화 지원제도 마련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산업핵심기술 침해 등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내용 담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이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12명으로 2022년 5명, 2021년 3명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시

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조례에는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매년 5년마다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